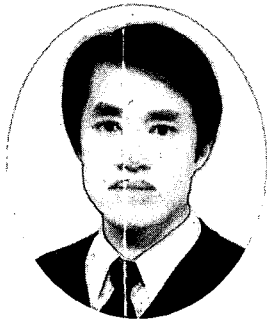


학부제는 강요하지 말아야

"If Universities do not study useless subjects, who will?"

— George Francis FitzGerald (1851–1901) in an 1892 letter to Nature



김 형 중

강원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학부제는 여러 학과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학과에 불과하다. 학부제는 현재 서울대에서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학과 사이의 경쟁에 의해 학생 정원, 교수 정원, 예산을 배분한다면 학부제의 논의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의 개정도 필요없고 학교의 제도도 현행 골격을 유지할 수 있어 제도개혁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경쟁력있는 대학

한국의 대학이 온상 속과 같은 아늑한 환경에 안주해 왔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대학교수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학생 또한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었다. 대학은 성역으로 취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대학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의 한 방법은 경쟁의 원칙에 따라 우수한 집단은 지원하고 열등한 집단은 더 분발하게 만들어 우수한 집단에 합류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경쟁의 원칙은 여러 부문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경쟁의 원칙이 대학에 도입될 수 밖

에 없는 이유는 다음 네가지

1. 교육시장의 개방
 2. 대학진학 예정자의 감소 추세
 3. 대학평가 제도의 정착
 4. 교육예산의 배분 원칙 변화
- 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대학진학 예정자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대학마다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수년전부터 전자공학과를 비롯한 학과의 평가가 실시되어왔고 특히 금년부터 대학평가가 실시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중앙일보가 금년부터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처럼 국내 대학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나 학술단체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금년 봄 교육부가 자연대학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했다. 금년 가을에는 같은 원칙으로 국책공대를 선정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교육부는 급여성 연구비도 같은 원칙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국립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에도 같은 원칙에 따라 국책대학원이 선정될 것이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은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그 몫은 언제나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 차등배분한다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어도 항의하기 어렵다. 설혹 이러한 차등지원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킨다고 해도 경쟁의 논리를 뒤집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경쟁의 논리가 금년들어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서울 공대내에서 균등분배에 반대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몇가지 내규가 제정되고 실행되어왔다. 논문발간실적, 연구비수혜실적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은 교수에게 대학원 신입생을 더 배정해왔다. 교수 승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제도의 정착으로 더 많은 논문이 국제학술논문지에 게재되고 외부연구비 수혜액과 건수가 늘어나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행했던 학과들 가운데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균등배분의 논리를 깨뜨리는 방안으로 학부제를 채택한 것이다.

학부제의 출현 이유

서울대에서 학부제를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1. 과목, 공간, 시설의 중복을 피한다.
2.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3.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원래 같은 계열에서 분화되었으므로 다시 원래의 모양을 회복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특별대우를 받기 원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서울대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통합을 결의하고부터 등장한 새로운 용어가 학부제이다. 학부제 실시 이전에는 더 많은 교수를 뽑고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보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다시 말해 다른 학과보다 더 지원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

도 늘었고 파격적인 재정지원도 받았으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도 따지고 보면 학생 정원을 늘림으로써 성취된 것이다. 우선 정원을 늘리고 교수 한명당 학생수가 많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논법을 구사한 것이다.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새로운 교수가 충원되어 대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학과 교수정원이라는 족쇄는 이러한 기회를 차단한다. 그렇다고 한번 임용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도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다보면 일단 정원을 채운 학과는 그때부터 신진교수를 선발할 때까지 진취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그 정원이라는 것도 학과마다 거의 같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산배정이라는 것도 비슷한 형편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다보면 결국 배정액은 산술평균에 근접하게 된다.

학문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이 균등분배 논리를 거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학과의 세분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여러 학과를 하나의 학과로 합치면 분명히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실험실의 중복을 피해 공간을 줄일 수 있다거나 과목의 수를 줄이고 보직교수의 수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과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전부터 학과의 교수정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예산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서 배정했다면 학부제라는 해괴한 용어는 출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과통합을 시급히 실시해야 할 대학에 공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강원대에서

는 농대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다른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비해 빨리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과수를 줄여 학과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공대는 농대에 비해 아직 우려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인기없는 학과는 같은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학부제와 학과제의 차이

그렇다면 학부제와 학과제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학과제는 학과제이고 학부제도 학과제일 뿐이다. 학과는 학과이고 학부도 여러개의 학과가 합쳐진 하나의 학과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학과가 합쳐졌으니 그렇지 못한 학과와는 차별해서 우대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대학에는 학장이 있고 그 아래 학과를 대표하는 학과장이 있다. 그런데 서울대의 세계의 학과는 학과장 위에 학부장을 두도록 했다. 여기서 학부장의 지위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부장이 여럿이면 학부장 모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하나의 학부만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학과장 모임에 소속 학과장은 빠지고 학부장만 참석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현재는 학부장과 학과장이 모두 학과모임에 참석한다고 들었다. 아직까지 학부장은 임의조직의 대표사이며 법적인 지위도 없다. 따라서 웁서버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부제는 “한지방 세가족” 형태를 하고 있다.

서울대의 학부제가 절름발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다른 대학도 아닌 바로 서울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우선 관계법령이 학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학부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부도 학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설혹 학부제가 정착되어 여러 학부가 생긴다고 해도 여러 학과가 모여 만들어진 학부와 소수의 학과가 모여 만들어진 학부, 그리고 끝까지 학과로 남기로 한 학과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제를 인정하면 대학의 조직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학부제로 가기 위해 개정해야 할 법령이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학과와 학부의 차이를 법령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학부를 인정한다면 학과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장 아래 학부장과 학과장이 병립하거나 상대적인 상하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또 학부를 만들 수 없는 학과는 학과로 볼 것인지 학부로 볼 것인지도 애매하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는 교육부에 아주 부담스러운 명예를 씌운 형국이 되었다. 교육부는 학부제라도 실시해 우대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학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제는 하나의 실험에 불과하므로 다른 대학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실험의 결과는 학과제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차등지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부제라는 틀 없이도 필요하다면 여러 학과가 통합을 시도해서 커다란 학과를 만들 것이다.

학부제의 강요는 부당하다

그렇다면 굳이 학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의 학과제는 과연 나쁜가? 모든 대학이 다 학부제로 이행해야 하는가? 학과제도 좋은 점이 많다. 당장 학부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이 다 학부제를 채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부제가 최선이라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학과를 세분화한데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새로운 학문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학과가 커지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도 고려된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적이며 비전을 지닌 소수의 젊은이들이 신속하게 시대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정책도 학부제보다는 학과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그리고 학과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신부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신설하기를 원했고 이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에 기자재나 설비 비용을 지원한 일도 있다. 최근 상공자원부도 전자게임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과의 설립을 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학과의 신설만이 사회가 원하는 산업인력배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는 증거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다보면 새로운 학문영역이 출현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반도체공학 등이 그렇다. 이런 학문분야에서는 기존의 학과 교수보다는 젊고 그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교수

들만으로 신설학과를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첨단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소위 유전공학은 첨단분야이고 섬유공학은 사양분야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편식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문제이다. 여러 학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모든 학생들이 다 첨단분야라고 분류되는 분야,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에 몰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전기공학이 사양 내지 정체분야로 분류된다면 좋은 학생이 몰리지 않고 따라서 교수도 시류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학생의 요구에 반해 계열을 가른다면 그것은 학부제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럴 때 학과제는 그나마 고유영역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기공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가 한국에서는 15개 학과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기계공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도 15개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일견 이러한 비난이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국의 비슷한 이름을 다 모아 보니 이렇게 학과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이지 실상 이처럼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에서 지방에 분교를 세울 때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와 다른 이름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한림대학의 전자제어공학과는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를 합쳐 만든 학과이고 따라서 이 대학에는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도 학과제에 익숙해져 있다. 한국이동통신에서 인턴사원을 뽑는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등의 학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 전

화를 걸어 제어계측공학과 출신은 지원할 수 없는지 물어본 일이 있다. 대답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학과를 제한하지 않으면 지원자를 가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물론 그것이 학과제를 권장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요점은 이미 학과제에 익숙해져 있고 기업은 어느 학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부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대상학과 선정에서의 의견대립
2. 통합한 후의 학과 또는 학부 명칭에 대한 이해 대립
3. 관제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데 따른 우려
4. 교수, 학생, 동문의 반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제를 무작정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의 언론이나 기업의 통합이 이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것처럼 강요에 의한 통합은 대학사회에 내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유와 경쟁이 중요해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이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학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학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해괴망측한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니 장점이 많아 다른 대학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리가 아니다. 그저 “교육부가 원하는 것 같으니”, “대학이 변혁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라는 무원칙한 이유에서 학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은 반드시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그

지나치게 세분화되었다는 학과의 사례

대 표 학 과	세분화된 유사학과
생 물 학 과 (7)	생물과학과, 미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과,
전 산 학 과 (8)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자통계학과, 정보과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처리학과, 컴퓨터학과
천 문 학 과 (7)	우주과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기상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대기과학과
건 축 학 과 (5)	건축공학과, 건축설비과, 실내건축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도시 공학과(5)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계획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15)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동력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동력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공업화학(11)	발효공학과, 미생물공학과, 생물공학과, 생물응용공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정밀화학과, 물질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15)	반도체공학과, 반도체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측공학과, 통신공학과, 통신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통신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8)	전산공학과, 전산기공학과, 전산정보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전자전산기공학과, 전자계산기공학과, 정보공학과

러나 변화가 모두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개혁에 동참해야 되지만 학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개혁으로 가는 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새삼스럽게 학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과제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제도상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 학과제를 발전시키고 학과의 세분화를 방지하자면 우선 균형발전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당장 균형발전의 논리를 거두기에는 대학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규제가 많다. 학과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지원된다면 그때는 균형발전의 논리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학의 재정

이 최소한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교수의 정원이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학부제라는 명칭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늘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제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 학과를 발전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현상유지시키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명분은 대학사회를 침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경쟁의 논리는 대학을 더 생동감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